

# 민주 입법독주 속도전에 국힘 의사일정 보이콧 태세

### 반쪽 개원에 반쪽 원 구성 여야 강대강 대치 정국 급열 민주 주도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역대급 충돌 예고

22대 국회 원(院) 구성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절정에 달하면서 향후 정국에 유례없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원 구성의 핵심인 국회의장단과 11개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 처리하면서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단독 개원해 국회의장과 운영·법사위원장을 독식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독주'를 두고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반영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내세우며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보름도 채 안돼 여야 대치가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며 "진행되는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전혀 협조하거나 동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의사일정에 대한 '보이콧'으로 읽힌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인 10일 밤 본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이 가져간 상임위원장에는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법안 처리의 관문이자 각종 특검을 담당하는 법사위, 그리고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과방위 등 '핵심' 상임위가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정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보건복지위

원장에는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은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은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박정 의원은 뽑혔다.

선출된 11명의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며, 특히 야당이 국회의장·법사위원·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사례 역시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지난 5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사상 첫 단독 개원을 한 데 이어, 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처리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민주당은 4·10 총선 결과로 나타난 의석수의 '압도적 우위'를 민의로 받들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비판하는 한편, 본회의를 연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을 향해 "민주당 의원총회 대변인"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또 항의 차원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우의장이 임의로 배정한 지당 소속 상임위원들의 사임계를 내는 한편,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그러면서 당 자체 정책 분야별 15개 특위를 가동, 여당의 지위를 활용한 당정 협의로 상임위 활동을 대체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원 구성을 두고 이처럼 맞붙은 여야 구도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은 물론, 향후 전개될 특검 및 쟁점법안 처리와 정기국회·예산국회에서도 강대강의 충돌을 예고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및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이번주에 마무리하고, 곧바로 18개 상임위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22대 국회가 개원부터 원구성까지 '반쪽 국회'로 시작되면서 향후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은 극에 달할 것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과방위도 반쪽 회의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사 선출을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부처 보고 불응시 청문회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각 부처 청문회와 현안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구성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본회의를 단독 개최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 등 11개 상임위 구성을 강행했다.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를 통해 "당장 부처 업무 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 내 실시하게 돼 있는 대정부질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해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위한 민생 대책 수립,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급하게 다뤄야 할 굵직한 민생현안들이 많다. 석유개방 문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을 하자는 집권 여당은 됐지만,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는 집권 여당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유례없는 14번의 거부권 행사에도 항의의 한 번도 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민의힘이 관례를 거론할 자격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를 고집하는 속내가 법사위를 틀어쥐고 앉아서 일 못하게 만들 속셈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고, 특검법을 막겠다고 법사위를 내놓으라고 '강짜'를 부리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오광록 기자 kroh@

### 이재명 "강경대응 국민만 피해...남북당국회담 고려해야"

#### 코로나대출 장기상환 '2호 법안' 민생·경제 현안 해결에도 속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민생 경제, 안보 등을 키워드로 한 메시지 발신에 주력하고 있다.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강조, 171석을 이끄는 거대 야당의 수장이자 유력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1일 당내 '한반도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며 "이 정부가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안보 상황을 악용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도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맞서 대북 확산기 방송을 재개한 데 대해 "남북 모두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이라며 양측을 싸잡아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외교 안보나 대북 관계는 정부-여당이 주도면밀하게 관리해야 하는 분야인데도 그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리가 비록 야당이지만 주장할 건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단독으로 일단 11개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이들 상임위에서 압도적 의석수를 활용해 산적한 민생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 민생현장이 참으로 어렵다. 하루가 급하고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원 구성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장시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코로나19 시기의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장은 이날 원내대

책회의에서 "코로나 대출 장기분할 상환법안을 민생 2호 법안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총선 공약이자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물론,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활성화 특별법(가칭)도 추진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이재명 연임 맞춤형'이라는 해석을 낳은 당헌·당규 개정 논란, 쌍방을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살형 선고로 더욱 커진 사법리스크를 타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유능하고 유일한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해 연임 논란에도 당내 지지기반을 굳힐 수 있고,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을 경우 연달아 닥쳐올 사법 리스크도 돌파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국회가 너무 거대 정치 이슈에 매몰돼 있다는 게 이 대표의 문제의식"이라며 "여야가 한발씩만 양보해도 풀 수 있는 민생 과제들을 해결하지는 메시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